
지역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건의

2014. 4.

전국경제인연합회 ·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총 괄 >

① [배경] 독립된 과세체제로 개편되었으며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의 별도 규정을 통해 법인에 대한 공제·감면 전면 배제시킴

- 과세표준은 현행대로 소득·법인세법에 연동하며, 이후 단계인 세율 및 납부세액 산출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결정
-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면서, 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근거 삭제
 - * '12년 기준 16만여개 기업의 국세 공제·감면세액(9.5조원) 10%, 9,500억 추가 부담 예상

② [문제점] 법인 지방소득세 부담 급증으로 지역일자리 및 투자 위축 우려

- 법인 지방소득세 부담 연 9,500억원 급증
 - * 일반기업(5,392개) 7,100억, 중소기업(157,678개) 2,400억, 총 9,500억 증가
- 기업 투자 및 고용 부담 증가로, 2조원의 사회적 손실 유발
 - * 직·간접 고용 1.3만명 감소, 2조원의 생산유발 효과 저해
-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조와 배치
- 중소기업 부담 급증에 따른 경쟁력 약화
 - * 70% 이상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담 증가
 -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세부담 차이로 조세 형평성 문제 발생
- 연구개발 관련 지원 축소로 기업 R&D 투자 및 고용 위축 예상
 - * 총 연구개발비 중 기업 연구개발투자 78% 차지
-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배제로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 발생
 - * 해외진출기업의 지방소득세 부담 증가로 내수기업과 세부담 차이 발생
- 이월세액공제 적용 배제로 기업간 조세부담 형평성 문제 발생
 - * 기업간 동일 공제 신청에도 이월세액 발생 유무에 따라 세부담 차이 발생

③ [건의사항]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감면 대상 내국법인으로 확대

-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받는 세액공제·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 허용
 - * '12년 기준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 58개 항목, 9조 5천억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공제·감면 대상확대 건의

기업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방세수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및 감면 대상에 내국법인 확대를 건의 드립니다.

I 건의 배경

- **[경과]**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확보 및 자주재원 확충을 목적으로 지방소득세를 독립세화하는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공포

* 지방세법,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13.12.30 개정)

< 개정된 지방소득세 주요 내용 >

- (독립된 과세체계) 현행의 부가세 방식을 독립세 방식으로 전면 개편
- (세율·세액공제 감면 별도 규정) 과세표준은 현행의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산정, 세액공제·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별도 규정
- (탄력세율 제도 도입) 지자체 단체장 조례 통해 세율 탄력적으로 조정
- (개인소득세 세액공제·감면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별도 규정)
- (법인 공제·감면 배제)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세액공제/감면 원칙 배제
- (적용시기) 법인소득은 2014년 이후 발생 소득에 대해 2015년부터 징수

- **[영향]** 법인분 지방소득세 공제·감면 배제로 9,500억원 추가부담 예상

- '12년 기준 16만여개 기업이 국세 공제·감면세액(9.5조원)의 10%인 9,500억원 추가부담 전망

* 일반기업(5,392개) 7,100억, 중소기업(157,678개) 2,400억, 총 9,500억 증가

Ⅱ 지방소득세 공제 · 감면 전면 배제로 인한 문제점

① 법인 지방소득세 부담 급증

- [기업 부담 급증] 16만개 기업에게 연 9,500억원의 부담을 증가시킴
- '13년 세법개정으로 인한 국세 주요항목 증가액과 비교해도 과도한 수준

< '13년 국세 주요항목과 지방소득세 부담 정도 비교 >

‘13년 법인세 주요 개정 항목 (7,758억)					VS	지방소득세(9,500억)	
최저한세 율 인상	고투공제 기본율 인하	투자세액공제율 축소				지방소득세 공제·감면배제	
		에너지 절약시설	R&D설비	환경시설		9,500억원	
2,970억원	2,000억원	1,710억원	876억원	202억원			

* 자료: 안행부, 국회예산정책처, 기재부

- 연 9,500억원 증가로 1년 만에 법인분 지방소득세 21% 급증
- * '12년 법인분 지방소득세 4.5조, 공제감면 배제로 5.4조원으로 증가 예상

② 지역투자 및 기업 지방이전 위축 우려

- [지역투자 위축] 단기적인 지방세수 증대보다 장기적인 투자 위축 우려
- 지자체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세제지원을 통한 기업투자 유인이 효과적
- [투자·고용 악화] 세부담 증가에 따라 기업 투자여력 약화, 이로 인해 고용 1.3만명, 생산 2조원 등의 사회적 손실 발생 우려

< 투자 축소로 인한 사회적 손실 >

세부담 증가	⇒	투자 축소	⇒	사회적 손실	
9,500억원		9,500억원		고용 1.3만명 손실	생산 2조원 손실

* 고용·생산 손실은 투자축소 금액에 2010년 산업연관표상 취업유발계수(10억원 당 13.6명), 생산유발계수(2.1)를 각각 곱하여 계산

③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조와 배치

-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효과 반감]** 지방이전 기업들의 지방소득세 부담이 증가하여 지역발전 취지의 세제감면 효과 축소

<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정책 >

국세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외국인투자, 제주투자진흥기구,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등 법인세 감면
투자활성화 대책	기업도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제주국제자유도시 등 입주기업 법인세 감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기업 지방 이전과 지역소재 기업 투자 확대에 입지와 자금, 인력, 연구개발 등 지원 발표
무역투자진흥회의	지역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기업 지방 유치를 위한 지원 확대

* 자료: 기재부, 국세통계연보

④ 중소기업 부담 급증에 따른 경쟁력 약화

- **[중소기업 부담급증]** 중소기업의 70%가 법인세 납부액의 24% 이상을 공제·감면 받고 있어, 중소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예정

< '13년 국세 주요항목과 지방소득세 부담 정도 비교 >

전체 중소기업수(A)	공제감면적용 기업수(B)	공제감면 활용률(B/A)
223,096	157,678	70.7%
총부담세액(A)	공제감면세액(외납제외)(B)	공제감면비율(B/(A+B))
7.2조	2.3조	24.2%

* 공제감면 활용률 = 공제감면 적용 기업수/전체 기업수(법인세 납부기업 한정)

* 세액공제 감면비율 = 공제감면세액/(총 부담세액+공제감면세액) (자료: '13 국세통계연보)

-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중소기업의 세부담 증가는 정부의 중소기업 세제 지원 강화 기조와 배치되어 정부 정책의 일관성 떨어뜨림
 - * '13년 세법개정안: 유망 서비스업 등 중소기업 세제지원, 중소기업 기술이전 세제지원 등
 -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소기업 R&D 투자 확대, 상생협력 통한 생산성 혁신 등
- **[개인·중소법인간 조세 형평성 문제]** 개인기업과 다를바 없는 법인 중소기업¹⁾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담증가로 인한 조세 형평성 문제 발생
 - 이는 정부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우대정책*과도 배치됨
 -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조특법 32조), 취·등록세 면제(조특법 119조 및 120조), 부가세 면제(부가세 10조)

1) 총 40만개 법인기업 중 33만개(82%)가 종사자수 20인 이하 [종사자수별 사업체수(법인/개인), 전국사업체조사(2012)]

수 연구개발 투자 위축 우려

- **[R&D투자 위축]** 기업 연구개발 투자는 국가 전체 연구개발비의 78%를 차지하고 있어, 내국법인의 조세부담 증가로 R&D투자 위축 우려
 - 기업체의 연구개발 투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전체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비중 역시 커지고 있음
 - * 기업 연구개발 투자액: '08년: 26조 → '09년: 28조 → '10년: 32조 → '11년: 38조 → '12년: 44조
 - * '12년 연구개발비 구성(%): 기업 78%, 공공(국공립) 13%, 대학 10% (자료: 과학기술통계)
 -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기업의 R&D투자 촉진 및 고용창출 유인의 효과가 있어 기업 연구개발 투자 촉진을 위해 중요
 - * 조세지원액 1% 증가시 추가 연구개발 투자 0.46% 유발 (손원익, '06)
 - * 기업 R&D 투자가 1조원 증가하면 1만 6,000명 일자리 창출 (하준경, '12)

⑥ 외국납부세액공제 배제로 국제적 이중과세 및 기업간 역차별 문제 발생

- **[이중과세 문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제도로써, 국내세법상 최저한세 적용에서도 제외
 - 우리나라에선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손금산입 중 납세자가 선택
 - * 내국법인(법인세법 제57조), 외국법인(법인세법 제97조), 개인거주자(소득세법 제57조)
 - 또한, 국세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실질적 감면의 성격이 아님을 인정하여 최저한세 적용에서도 제외
 - * “(최저한세 적용 제외 대상)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실질적인 감면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기재부, 조세지출 기본계획, '14.3)

※ (해외사례)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1) 외국소득면제, 2) 외국납부세액공제, 3) 손금산입 등을 통해 자국법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노력

-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호주 등 이중과세 방지규정 운영중

- **[해외진출기업 역차별]** 해외진출기업과 내수기업간 세부담 차이 유발
 - 해외진출기업의 경우 해외수익 국내 송금시 외국납부세액이 익금산입, 지방소득세 과표를 증가시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됨

7 이월세액공제 배제로 기업간 형평성 문제 발생

- **[기업간 형평성 문제]** 동일한 투자를 통해 세액공제가 발생했음에도, 현행 지방세법 적용으로 기업간 지방소득세 부담 차이 발생 가능
 - **[예측가능성 침해]** 이월세액공제 배제는 舊지방세법에 근거, 투자를 결정한 법인의 예측가능성을 침해시키므로 경과규정 마련 필요
 - 기업은 既투자 결정시 舊지방세법에 근거하여 공제액 예측
 - 조세법령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는 경우, 납세자 신뢰보호 및 예측가능성 침해되지 않도록 경과 규정* 마련 필요
- * 경과규정(예): 조특법 부칙(법률 제12173호 제66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8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기간 및 부담 논의 부족

- **[짧은 의견수렴 기간]** 3개월*만에 개정되면서 의견 수렴 기간 부족
 - 지방소비세 도입과정(14개월)과 비교해도 단기간(3개월)에 진행 되었으며 납세부담이 있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않았음
 - * 지방소비세(14개월): 논의 초안('08.10) → 도입 추진 명시('08.12) → 특별위원회 구성('09.2) →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공청회('09.2~10)) → 개정('09.12)
 - * 지방소득세(3개월): 논의 초안('13.9) → 관계 부처 의견 수렴('13.12.5~9) → 개정('13.12)
- **[법인 세부담 논의 부족]** 법인분 세액공제·감면이 전면 배제 되어, 법인의 지방소득세 부담이 증가하였으나 법인 부담 논의 부족
 - 정부는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논의 당시 법인분 세액공제·감면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전면 폐지시킴
 - * 「지방소득세를 현행 부가세 방식에서 국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법인세분에 대해 세액공제·감면 정비 추진」 (기재부, '13.09)
 - 국세의 경우 세수효과가 경미한 공제·감면 정비에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치는데, 지방소득세 개편은 사실상 증세임에도 법인 부담 논의 부족

III 건의사항

□ [건의사항]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받는 세액공제·감면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 허용

-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58개 공제·감면 조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준용
- (예) 지특법 제1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 각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 및 내국법인의 지방소득세에 대해 공제한다.

- 이월세액공제의 대해 구법 적용하도록 부칙 개정

*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경과조치(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2175호 제6-1호, 2014.1.1.)>

○ 세액공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상 27개 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지급조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금출연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법인·세무법인),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 세액공제, 이월세액공제, 기타

○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상 31개 감면

해외 자원개발 투자배당 감면,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지방이전 중소기업 감면, 수도권 외 지역 이전 공장·본사에 대한 감면, 영농·어조합법인 감면, 농업회사법인 감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공장이전 감면,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 감면,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 감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감면, 기타 외국인투자유치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감면, 제주투자진흥기구 등 입주기업 감면, 기업도시 입주기업 감면, 창업 중소·벤처기업 감면,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 감면,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감면, 국제금융거래 이자소득 면제, 사업전환 중소기업 감면,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주식양도차익감면, 지방이전 중소기업 감면, 농공단지 입주기업 감면,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면, 산림개발소득 감면, 기타